

#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76]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3. 12. 20. | 발행인 : 문순덕

## 정부 및 지자체 성 · 재생산 건강 정책 현황과 시사점

정 여 진 선임연구위원

### 목 차

1. 성 · 재생산 건강 및 권리(SRHR)란?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성 ·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 현황
3. 지자체별 성 ·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 현황
4. 논의 및 제주지역 시사점

## 1. 성 · 재생산 건강 및 권리(SRHR)란?

- 그간 성 · 재생산에 대한 규제는 인구통제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율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왔음. 이에 1979년 UN 34차 총회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면서, 그 안에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포함하게 됨. 그 이후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와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인권'으로 정의하고, 국가는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상담,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에 이룸
- 성 ·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SRHR)는 그 어떠한 강제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서 나아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김동식, 송효진, 동제연, 이인선, 2018). 그러나 국가에 따라 성 ·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인권으로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음. 이에 2003년 UN 인권위원회에서 '성 · 재생산 건강은 건강권 측면에서 필수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국제사회는 다시금 성 ·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우리나라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간 5년의 주기로 기본계획을 3차례 수립하면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명시적으로 다룬 적이 없음. 다만 인구조절과 임신·출산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성의 건강 문제로만 협소하게 다루어 오다가, 20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돌봄 정책 내에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이라는 하나의 정책 카테고리 자리잡게 됨. 이러한 배경에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 정책 기조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 환경도 인구의 생애주기의 변화 및 환경적 변화에 따른 생식건강 악화 등 가임기 중심의 임신·출산 건강 지원만으로는 건강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임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RHR)는 성과 재생산 전반에 질병·기능 저하, 장애가 없는 상태를 포함하며 신체적·정서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well being)한 상태를 의미함. 우리나라 국가 단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중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가장 많은 정책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을 살펴보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에 근거한 각 지자체별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 현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크게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첫 번째 전략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내에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정책 카테고리가 위치함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사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중심의 건강에서 남녀 모두의 ‘보편적 건강’ 측면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성 인식 제고 및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문화 조성
  -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여성·영유아 등 건강을 생애전반에서 보장할 수 있는 법제 정비 및 ‘성인지·인권 중’심으로 포괄적인 성·재생산권 계획 마련

【 그림 1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정책 체계도



출처 :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정책의 영역에 따른 추진 과제 및 소관 부처를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음
  -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영역의 주요 사업은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비동의 간음죄 검토 등이 있음
  -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영역의 주요 사업은 모자보건 중심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생식건강 및 임신·출산·양육 상담서비스 제공, 안전한 피임과 임신 유지·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으로 청소년과 청년기 교육 및 검진 지원, 월경 건강 보장을 위한 인식제고 및 월경용품 지급 등이 있음
  -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의 주요 사업은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조기 검진,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확대, 임신부·영아 건강관리(생애초기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여성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지원), 청소년 산모 지원 등을 추진하며,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이 있음
- 제3차 기본계획과 비교했을 때, 주요 사업에서 보건의료영역 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 예방, 월경 휴가 보장,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등 폭력과 노동 영역이 보다 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성·재생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모성 지원에서 건강권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생애주기에 따른 사업은 청소년과 청년기 생식건강에 대한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임

【 표 1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영역의 정책 과제

정책 영역		추진 과제	소관 부처
①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①-1. 성·재생산권 보장 기반 마련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가부
	①-2.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아동·청소년 성교육 강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교육부, 여가부
	①-3.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비동의 간음죄 검토	여가부, 방통위, 법무부
②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②-1. 모자보건 중심에서 포괄적 법제·사업 정비	모자보건법 개정, 생식건강 및 임신·출산·양육 상담서비스 제공, 안전한 피임과 임신 유지·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복지부
	②-2.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청소년(교육 및 홍보), 청년기(생식건강 검진 지원), 유해물질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질병관리청,
	②-3. 월경 건강 보장	인식제고 및 생리휴가·결석 사용 보장 월경용품 안전성 제고, 청소년 생리대 지급	교육부, 고용부, 식약처, 여가부
③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③-1.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조기 검진,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확대, 임신부·영아 건강관리 (생애초기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여성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지원), 청소년 산모 지원	복지부, 여가부
	③-2.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시술 안전성 제고, 정보제공·상담 강화, 난임치료휴가 확대	복지부, 고용부
	③-3.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 의료인식 개선	복지부



### 3. 지자체별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 현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총괄)의 지자체별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성·재생산 건강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음. 상술한 바와 같이, 성·재생산 관련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4가지 추진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내 5개 추진과제 중 하나임. 즉, 성·재생산 관련 정책이 따로 범주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영역 내 공통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해 수기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음<sup>1)</sup>
- 이를 위해 2022년 SRHR 제주지역 공동포럼에서 발표한 이은영(2022)의 자료를 기초로 1차 분류한 후, <표 1>의 정책 영역별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성·재생산 건강 정책 영역으로 판단되지 않는 일반 건강 사업은 한번 더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음
- 예컨대, 서울, 울산, 제주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추진전략 ④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의 ‘아동건강 및 의료지원’ 중 정신건강 예방 및 지원 강화 영역 사업으로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 이 밖에도 ‘아동의 눈 건강 지원(서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인천)’,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경기도)’와 같은 명백히 성·재생산 건강 정책으로 판단되지 않는 건강정책들은 제외하였음. 아울러 서울시의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또한 젠더 폭력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음. 단,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성 난청’과 같은 선청성 질환의 경우는 17개 지자체 중 8개 시도에서 성·재생산 건강정책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빠른 진단을 통한 건강 지원적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분류함
- 최종 분류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지자체별 2023년 시행계획상 성·재생산 건강정책은 아래 <표 2>와 같음. 공통사업과 자체 사업을 합하여, 서울 16개, 부산 21개, 대구 13개, 인천 16개, 광주 13개, 대전<sup>2)</sup> 2개, 울산 20개, 세종 13개, 경기 11개, 강원 7개, 충북 11개, 충남 19개, 전북 19개, 전남 12개, 경북 6개, 경남 18개, 제주 10개임. 이 숫자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재생산 건강정책의 많고 적음이라기 보다는,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재생산 건강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보아야 할 것임
- <표 2>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자체 사업으로도 중복 제시되는 등 아직까지 지방정부에서는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영유아, 아동, 임신출산 관련 건강 정책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모자보건법 내용을 넘어서는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공통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2개 사업이 있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출산 및 난임관련 사업 2개, 임신출산 관련 한약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모유 수유 등 4개, 임신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의자 지급과 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등이 있었음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총괄) 보고서의 각 지자체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붙임자료 (p74~795)

2) 2022년과 비교하여, 공통사업 13건 및 자체사업 2건이 줄어듦. 이에 대전광역시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과 통화하여 이는 부서조정으로 인한 누락이며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함(11. 21일)

【 표 2 】 지자체별 성·재생산 건강 정책

지자체	공통 사업	지체 사업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위기 10대 여성 지원사업</li> <li>·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li> <li>· 저소득층 기저귀 교체 분유지원사업</li> <li>·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영유아 건강관리)</li> <li>· mampan 임신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li> <li>·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제로 안전한 학교 ·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li> <li>·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지원</li> <li>· 서울시 임신·출산 직인 산전·산후 건강관리</li> <li>·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li> <li>·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li> <li>· 남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li> </ul>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방지(디지털성범죄) 지원</li> <li>·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li> <li>·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li> <li>· 공공산후조리 서비스 단계적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li> <li>· mampan 임신 원스톱서비스</li> <li>· 장애인 임신부 지원(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성 보건사업)</li> <li>· 예비부부, 신혼부부 건강검진 · 남녀 난임 종합지원(난임지원)</li> <li>·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li> <li>· 임신·출산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li> <li>· 남녀 난임 종합지원(난임지원 바우처, 한방난임 지원사업)</li> <li>· 예비산모·임산부 풍진검사 지원</li> <li>· 예비맘 건강검진 지원</li> <li>· 퍼스트 임신부 지원서비스 '남구 삼신할매 상담소'</li> <li>· 양성평등교육 ·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li> <li>·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아기맘센터 운영</li> </ul>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li> <li>·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li> <li>·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li> <li>·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관리비 지원</li> <li>· 선천성 난청 및 보청기 지원</li> <li>· 임신부 아동건강관리(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li> <li>·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li> <li>·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li> <li>·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li> <li>·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li> </ul>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li> <li>· 선천성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li> <li>·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li> <li>·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li> <l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li> <li>·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 난임 시술비 지원</li> <li>·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li> <li>·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li> <li>·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 학교 성교육 내실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보건소-연수구)</li> <li>·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li> <li>·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li> <li>·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부평구)</li> <li>·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계양구)</li> </ul>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li> <li>·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li> <li>·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li> <li>·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 사업</li> <li>·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li> <li>·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파견</li> <li>·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li> <li>·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li> <li>· 여성장애인 친화산부인과 지정 운영</li> <li>·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홍보</li> <li>· 미래인구 건강가꾸기 · 예비부모 건강검진 사업</li> </ul>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성구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산후조리지원</li> </ul>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li> <li>·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li> <li>·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li> <li>·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li> <li>·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li> <li>·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li> <li>·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li> <li>·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li> <li>·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li> <li>· 생애 초기 건강검진 시범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주군)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제로</li> <li>· 모자보건 지원사업</li> <li>·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사업</li> <li>·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li> <li>·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li> <li>·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li> </ul>
세종특별자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 · 영유아 건강검진</li> <li>·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지원</li> <l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생아청각선별검사</li> <li>·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li> <li>·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li> <li>·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표준 모자보건수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li> <li>· 임신부 전용 주차구역</li> <li>·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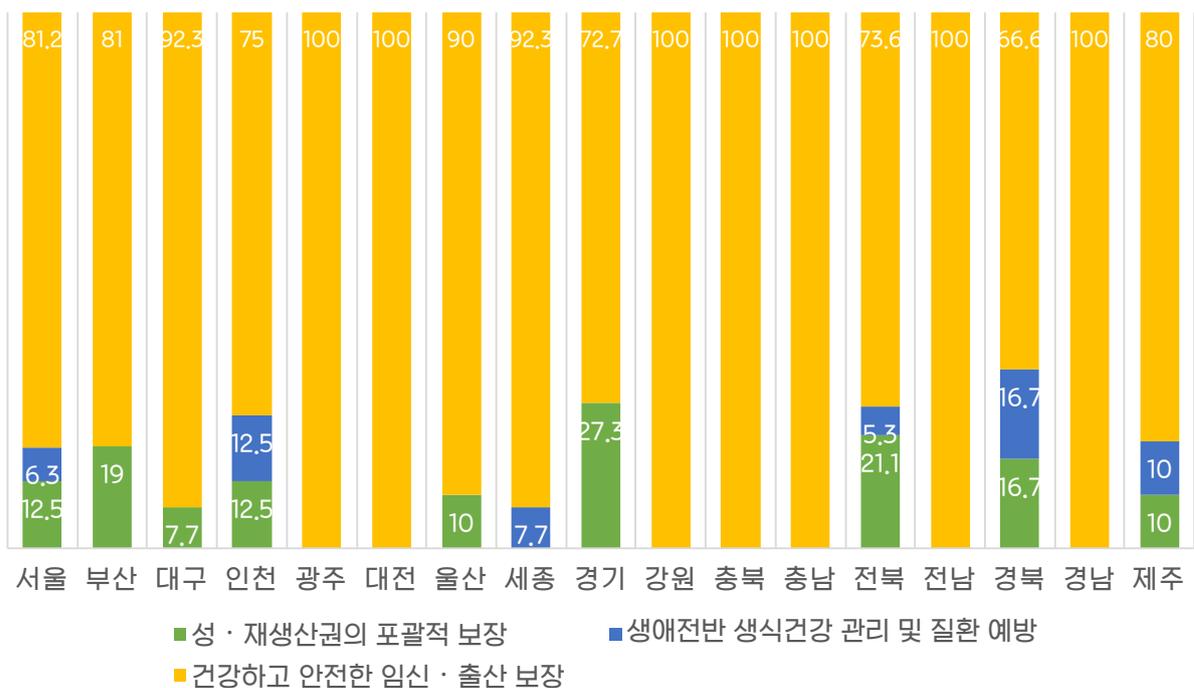
【 표 2 】 지자체별 성·재생산 건강 정책

지자체	공통 사업	지체 사업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교육 및 성주류화 정책 추진</li> <li>· 성평등 캠페인 추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li> <li>· 경기도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li> <li>·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li> <l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li> <li>·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li> <li>·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li> </ul>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li> <li>·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li> <li>· 의료취약지 지원(소아청소년과)</li> <li>· 분만취약지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부부 영양보충식품 지원</li> <li>·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li> </ul>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li> <li>·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li> <li>· 산부인과 운영 지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li> <li>·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li> <li>·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산후관리비 지원</li> <li>·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제외, 인공수정)</li> <l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임산부 산전 진료비 지원</li> </ul>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li> <li>·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사업</li> <li>·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li> <li>·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li> <li>·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li> <li>·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li> <li>· 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li> <li>·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부부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li> <li>·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li> <li>·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li> <li>·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li> <li>· 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li> <li>·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li> <li>·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li> <li>·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li> </ul>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지원</li> <li>·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li> <li>·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li> <li>·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li> <li>· 분만취약지 지원사업</li> <li>· 해바라기 센터 운영 ·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li> <li>·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li> <li>·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li> <li>· 산후우울증 검사지원 ·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li> <li>·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자체)</li> <li>·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자체)</li> <li>· 한방난임 치료 지원 ·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li> <li>·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li> </ul>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li> <li>·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li> <li>·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li> <li>·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li> <li>· 영유아 정장제 · 영양제 지원</li> <li>·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li> <li>·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난임 기초검진비 지원</li> <li>· 신혼 · 예비 · 난임부부 산전검사 지원</li> <li>· 우울타파, 행복육아 산후우울증 극복 프로젝트</li> </ul>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li> <li>·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부인과 진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 등</li> <li>·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li> </ul>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li> <li>·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li> <li>·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li> <li>· 의료수급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사 사업</li> <li>·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li> <li>·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li> <li>·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li> <li>· 분만취약지 지원(찾아가는 산부인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해시) 건강한 임신, 출산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li> <li>·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사업</li> <li>· (거제시) 임산부 영양제 지급</li> <li>·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li> <li>·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li> <li>·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확대지원</li> <li>·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li> </ul>
제주 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li> <li>·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 및 태아 산모 검진 지원</li> <li>· 임산부 전용의자 지급 근무환경 개선</li> <li>·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li> <li>· 출산여성 한약지원 ·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li> <li>·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 모유수유실 설치 지원</li> <li>·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확대)</li> </ul>

- 이를 '5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내 세가지 추진 과제별 빈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음. 17개 지자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사업이 전체 사업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적게는 66.6%에서 많게는 100%에 이르고 있음.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및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사업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는 7개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이 여기에 해당됨
- 이렇듯 각 지자체별 성·재생산 건강 사업이 대부분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에만 포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이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즉 성·재생산 건강은 아직까지도 임신·출산에 국한해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위주로 중앙에 실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컨대, 여성과 영유아 심지어 아동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임신과 출산 관련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 세 영역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영역별 하위 사업에서도 가장 고른 분포를 보이는 지자체는 전라북도임. 총 19개 사업 중,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에 4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자체 차원에서 아직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영역에서도 '월경 건강 보장'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결과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은 73.6%로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사업 비중을 보임. 경상북도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이 66.6%로 가장 낮지만, 총 사업 수가 6개뿐이기 때문에 전북보다 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 그림 2 】 지자체별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사업 영역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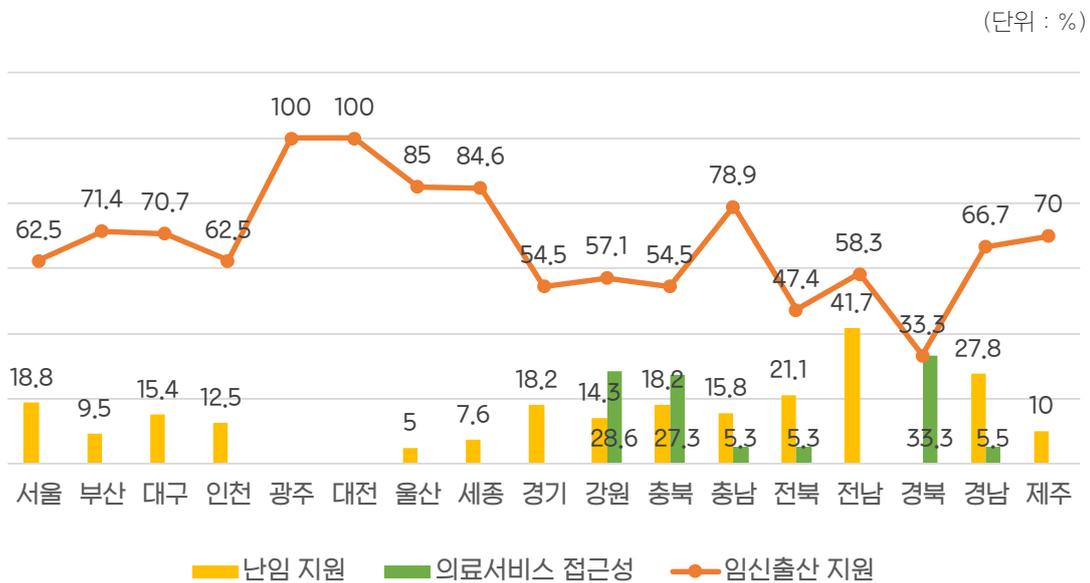
(단위 : %)





- 각 영역별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 빈도를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의 경우, 임신·출산 지원, 난임 지원,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 이루어져 있는데,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신·출산 지원’사업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 주로 출산비용 지원, 기저귀·분유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비용 지원이 가장 많고, 장애인, 고위험 임신부, 청소년 등 대상별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기도 함. 부산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인천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충남 ‘신혼부부 건강관리’, 전남 ‘신혼, 예비, 난임부부 사전검사 지원’ 사업 등은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기존의 모성으로 국한되었던 대상을 부부로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아짐
- ‘난임지원 사업’은 광주, 대전,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통사업 내용으로 시술비 지원과 한방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남의 경우 난임 진단비 및 격려금 등의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고, 대구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이 포함됨
- ‘의료서비스 접근성’ 관련 사업이 없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11개이며, 강원과 충북의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이라는 중앙정부의 취지와는 맞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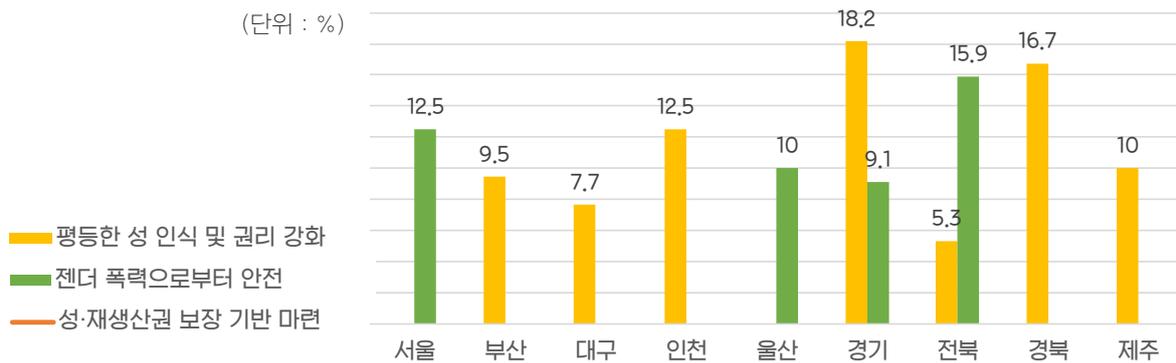
【 그림 3 】 지자체별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 사업 빈도



- 다음으로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영역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성·재생산권 보장 기반 마련’ 사업은 17개 지자체 모두에서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별로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평등한 성인식 및 권리 강화’ 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학교 성교육 내실화’, ‘성평등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주는 전체 10개 사업 중, ‘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1개 사업이 이 영역에 포함됨
-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은 서울, 울산, 경기,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디지털 성범죄 및 4대 폭력 방지와 대처에 관한 사업임. 서울시의 경우 ‘위기십대 여성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까지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영역은 3가지 사업내용이 고르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정책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건강 정책으로서뿐만 아니라, 교육과 여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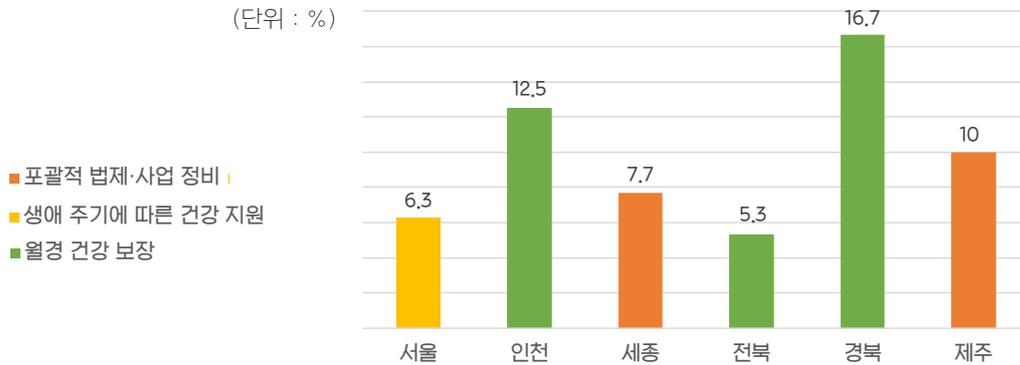
【 그림 4 】 지자체별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영역 사업 빈도



- 마지막으로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영역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음. ‘모자보건 중심에서 포괄적 법제·사업 정비’ 사업이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1건씩 추진되고 있음. ‘월경 건강 보장’은 인천, 전북, 경북 모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음. 월경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생리휴가나 결석 사용 보장 등에 관한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 등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됨
-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지원’은 청소년 및 청년기 대상 교육 및 홍보, 생식건강 검진 지원 등의 사업과 유해물질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인데, 서울시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사업에서 생애주기라는 용어가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적 성·재생산권 보장 차원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진 실시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정부정책을 반영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갱년기, 노년기 등 다양한 생애주기에 따른 성·재생산권 보장 정책은 전무한데, 임신과 출산 시기가 지나더라도 성·재생산권은 포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건강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관심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림 5 】 지자체별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영역 사업 빈도



## 4. 논의 및 제주지역 시사점

- 올해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시행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시행이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임. 또한 이은영(2022)이 지적한 바대로, 공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사업 내용이 매우 상이하며 자체사업과의 구분도 모호함. 이는 중앙의 정책 방향이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여짐
- 뿐만 아니라 정책 영역별 불균형도 매우 심한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이 전체 사업 중 90% 이상인 시도가 17개 시도 중 10개에 해당하고 있음. 이는 아직까지도 가임기 중심의 임신·출산만이 성·재생산 건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성·재생산건강 및 건강권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교육, 노동, 사회 등 전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보건 의료 영역에 국한해 매우 협소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가임기 여성을 주 대상으로 보고 있음
- 기존 모자보건 중심에서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포괄적 성·재생산 보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아직까지 지자체 사업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장년 및 노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임신과 출산 관련 서비스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보건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노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재생산 건강 및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적 차원의 정책들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수용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정책 영역별로 사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음. 세 영역 중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이 80%로 가장 많았고,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영역에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1건,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영역에는 임신부 전용의자 지급 근무환경 개선 1건이 있었음

- 세 영역 내 총 9개의 하위 사업에서도 중앙의 다양한 사업과제와는 달리 매우 한정적으로만 추진되고 있었는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총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난임지원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영역은 한방난임지원 1건이 전부임. 내년부터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별 지원 대상 기준이 없어지고, 난자동결 등 각 지자체별로 자체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것임. 이에 제주에서도 선제적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통한 재생산건강 지원 확대와 홍보를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외에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처에 관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소년 대상 성교육, 월경건강 보장 사업, 청년기와 중장년기 대상 생식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검진 지원, 갱년기 및 노년기 여성의 비뇨생식기 건강에 대한 교육과 의료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필요

- 각 지자체별 정책 현황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라는 용어는 공무원에게조차 아직 낯설게 느껴지고 있어 용어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모자보건 관점에서 성·재생산 건강 관점으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임신과 출산관련 정책들이 모성과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선택과 건강권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임. 성과 재생산 관련한 행위들 전반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매우 큰 인식의 변화가 요구됨

## ■ 재생산 건강권 강화를 위한 난임예방교육 확대 및 난임 당사자 심리적 지원 강화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난임 정책은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의료적 지원과 비용 지원 등 양적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측면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임신 전부터 남녀가 출산의 공동 주체로서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함 (정여진 외, 2023)
- 이를 위하여 재생산 건강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난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난임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난임 당사자를 기존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과 우선 연계하여 심리검사, 개별 상담,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사람들에게 대한 의료적 개입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 수립

- 비가임기 여성의 의료이용 지연과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함. 현재 가임기 여성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건강 위주의 정책에서,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건강 이슈에 따른 정책으로 확장해야 함
- 청소년기에는 성교육 뿐만 아니라 생식건강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청년기는 실질적 가임기이기 때문에 생식건강 사전검사 활성화와 출산 후 건강까지 고려한 안전한 임신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중장년기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 전후 신체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건강 이슈가 다수 제기되지만, 적극적으로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노년기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 정례적인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생산되는 통계는 월경, 성관계, 피임, 임신·출산, 질병 등에 관한 보건 부문이며, 건강 현황에 대한 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권리에 관한 통계는 별로 없는 실정임(김동식 외, 2021). 다양한 분야에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 정례적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 구축 및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참고문헌 ■

김동식·송효진·동제연·이인선(2019.).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조영주·김효정·정연주·동제연·김남순·이현주·김채운(2021.).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은영(2022). 지자체 성·재생산 건강 정책 현황 및 과제. 2022년 SRHR 제주지역 공동포럼 자료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정여진·문채수연·고지영(2023). 제주지역 난임부부 현황과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